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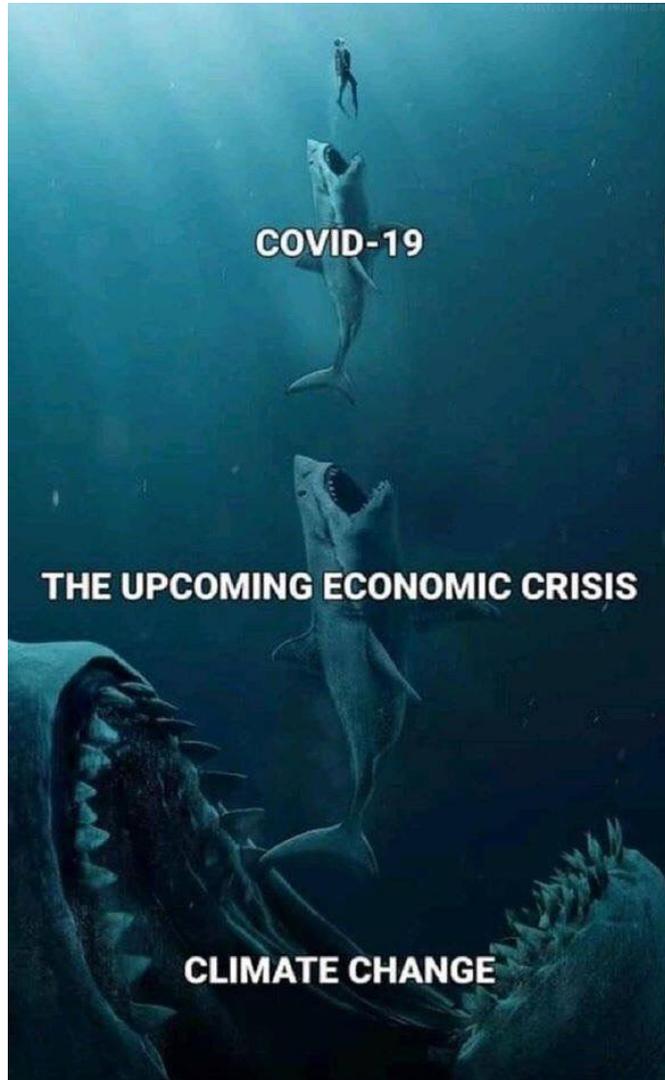
한국사회 그린 뉴딜과 정부 · 국회의 역할

이유진

leeyujin201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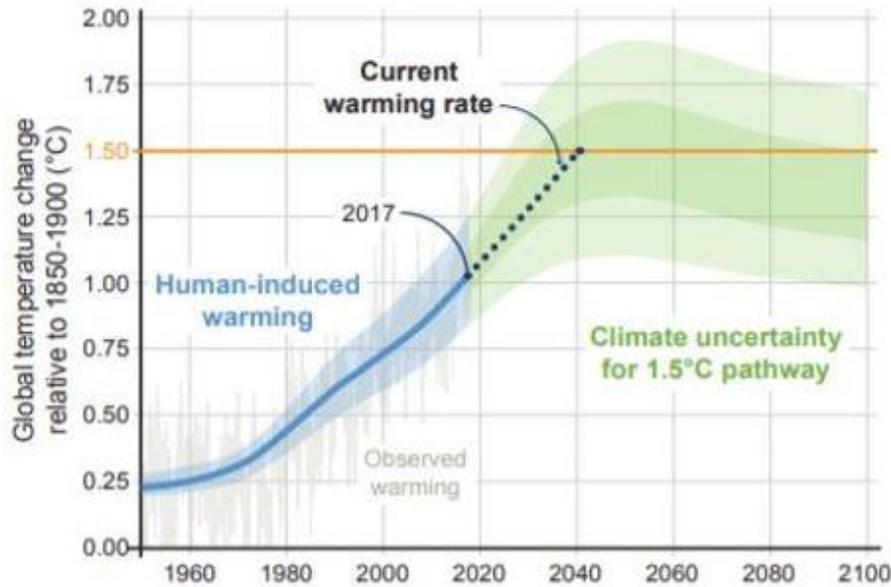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코로나 19, 경제위기, 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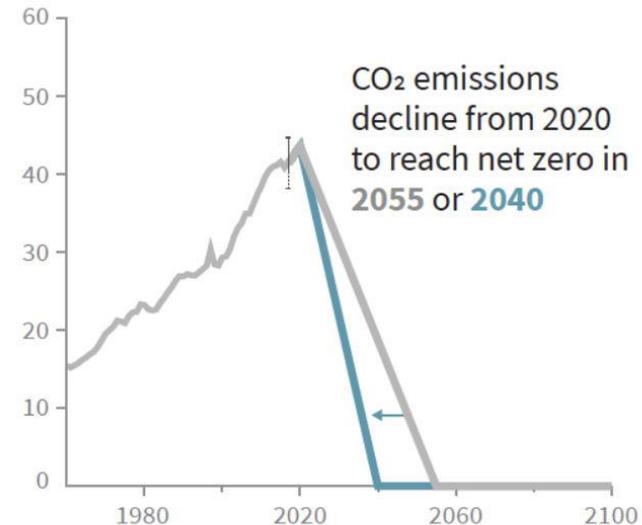
- [다중 위기] 코로나 19 < 경제위기 < 기후위기
- **(경제위기) 코로나 19가 심화 시킨 불평등** → 세계 위협에 놓인 사람들 → 공공투자와 사회안전망 →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삶 보장 → 녹색 산업 생태계조성과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 **(연속 재난) 지진 + 폭염**, 한파, 슈퍼태풍, 폭설, 강풍과 같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난은 '비대면' 으로 대처 어려움 → 인프라 + 제도 + 지역사회 + 디지털 결합 → 주거, 교통, 문화, 생태환경 등 모두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기후위기 (적응)하는 사회안전망과 회복력
- 넷 제로 사회를 위한 (감축)과 (전환)

2019년 국제사회 그린 뉴딜 등장 배경 - 1.5°C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은 1도 상승, 이대로 배출량이 증가하면 2040년경 1.5°C (출처 : IPCC 1.5도 특별보고서)

b) Stylized net global CO₂ emission pathways
Billion tonnes CO₂ per year (GtCO₂/yr)



Graphic from the IPCC's special report on 1.5C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 2050년 넷 제로

(출처 : IPCC 1.5도 특별보고서)

2019년 미국 그린 뉴딜과 EU 그린 딜



	미국 그린 뉴딜	EU 그린 딜
개념	기후위기 대응과 미국사회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대안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
온실가스 감축목표	100%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2050년 전에 넷 제로 달성	2050년 넷 제로 달성 경제성장과 자원 사용의 디커플링
주요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달성 2)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변형, 경제적 안정 보장 3) 21세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 투자 4)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지역사회 회복력 증진, 건강한 식품, 자연, 지속가능한 환경 5)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와 형평성 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위험과 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을 지키며 천연 자원을 보호 보존 2) 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와 민간자본이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도록 유인 3) 모든 전환은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야 함 - 사람이 먼저로 지역, 산업, 노동자 등 도전에 직면할 이들을 먼저 고려함

미국 그린 뉴딜과 EU 그린 딜

	미국 그린 뉴딜	EU 그린 딜
주요 정책	<p>세계대전을 치르는 태세로 10년간 자원 동원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력 구축 ✓ 인프라의 개선 및 업그레이드 ✓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 ✓ 분산형 스마트그리드 ✓ 건축물 에너지효율 업그레이드 ✓ 청정제조업의 가속화 지속가능한 농업 ✓ 수송시스템 개혁 ✓ 기후변화 장기적 건강 위험 완화 ✓ 조림, 보전, 자연복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과 오염 제거 ✓ 생태계 보호와 복원 ✓ 유해폐기물 등으로 오염지역 정화 ✓ 다른 오염원 확인 및 제거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2050 기후 목표 상향 조정 ✓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변화 ✓ 에너지 절약, 자원 고효율적 건축 ✓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 농업시스템 ✓ 생태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 보존 및 회복 ✓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 배출 제로화
재원조달	10년 동안 1.7조 달러(2,041조 7,000억 원)	10년간 1조 유로(1,354조) 이상 투자 (개별회원국 독자예산 제외)
주요 합의	민주당 바이든 당선 시 그린 뉴딜, 예산 확보기술 해법 등 논란, 선라이즈운동	탄소국경세, 유럽 기후 정책 세계 표준화, 폴란드 등 유럽내 저항

출처: H.Res.109(하원 결의안 109). 2019.2.7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EUROPEAN COMMISSION, 2019.12.11. The European Green Deal

EU 그린 딜 추진 일정

2019.12.11

유럽 그린딜(EGD) 발표

- 1.14 EGD 투자계획, 공정 전환 메커니즘 발표
- 3.4 유럽기후법 제안, 유럽기후협약 발표
- 3.10 유럽신산업전략 발표

2020.4.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 생물다양성 전략 발표

2020 여름

2030 탄소배출량 50~55% 감축 계획 수립

2020.6.

배출권거래제 지침, 에너지 효율성 지침, 재생에너지 지침,
에너지 과세 지침 등 각종 입법 개정안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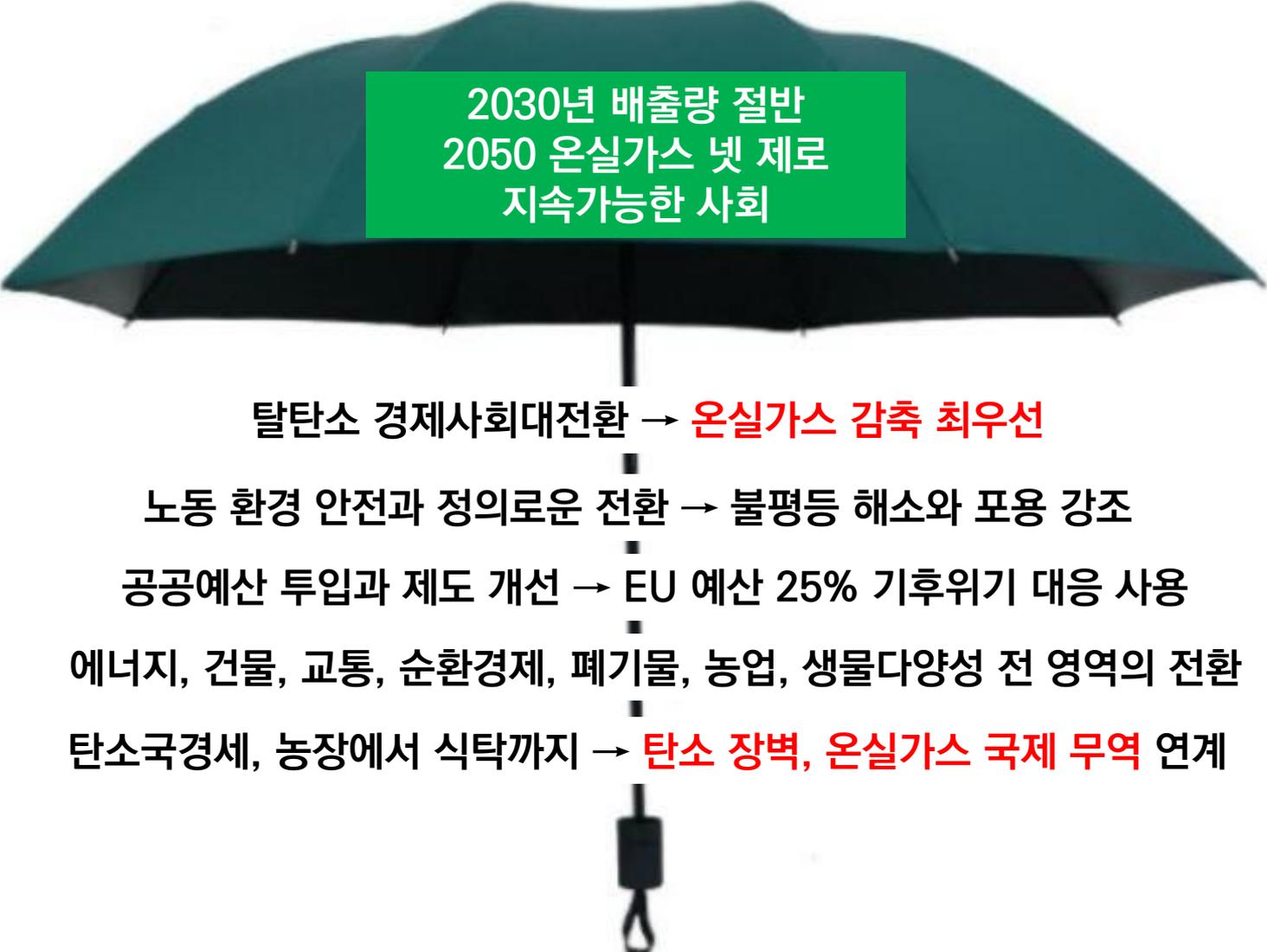
2021

특정 산업분야 **탄소국경세 조정 제도 입법안 제출**

2020/202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새로운 EU 전략 수립

그린 뉴딜 - 우산 정책



2030년 배출량 절반
2050 온실가스 넷 제로
지속가능한 사회

탈탄소 경제사회대전환 →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노동 환경 안전과 정의로운 전환 → 불평등 해소와 포용 강조

공공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 → EU 예산 25% 기후위기 대응 사용

에너지, 건물, 교통, 순환경제, 폐기물, 농업, 생물다양성 전 영역의 전환

탄소국경세, 농장에서 식탁까지 → 탄소 장벽, 온실가스 국제 무역 연계

그린 뉴딜 개념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 녹색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넷 제로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
대규모 공공 자금 투입 경제 사회 제도 대개혁 녹색일자리 창출



루즈벨트 그린 뉴딜 1935년 와그너법은 단결과 단체교섭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협상력 강화. 사회보장법은 고용보험과 연금 사회안전망 확립

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그린 뉴딜 공약

	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정책 가치	거대한 전환 10년 프로젝트, 그린 뉴딜 경제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 실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넷 제로 2030년까지 배출량 50% 감축	2050년 배출제로 2030년까지 배출량 50% 감축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
주요 정책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40%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200만 호 그린리모델링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100% 재생에너지, 대중교통공영제 불평등 잡는 3주택 소유금지 그린리모델링과 식량 자급률 제고	석탄발전소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금융' 중단 RE100 전기차 수소차 확대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불평등완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전환기 기본소득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에너지 복지
국제협력	한중일 공동 탄소가격 설정	남북 공동 그린뉴딜	PNG인프라 동북아 슈퍼그리드
법·제도화	그린 뉴딜 특별법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기후위기대응기본법·기후비상특위 탄소예산·탄소영향평가제도	그린 뉴딜 기본법
재원	확대 재정, 녹색채권, 탄소세 부과, 그린뱅크	탄소세, 토건 예산 감축 탄소배출기업 과세, 소비세 증세	탄소세 도입 검토 환경개선특별회계 확충
예산 규모	GDP 1~3% 투자	-	-

공존의 시대와 그린 뉴딜 : 김성환 의원(2020년 1월 15일)

🌍 그린 뉴딜 : 국내 추진 방향

국내 경제와 현재산업 구조를 고려한 한국형 그린 뉴딜의 추진 필요

정책 방향



정책 과제

<발전>

석탄발전 조기폐쇄
RE100 제도 도입
재생E 산업 육성

<수송>

내연기관차 단종
전기/수소차 확대
고속충전기술 선점

에너지제로빌딩 및
에너지효율화
시장 확대

수소경제 조기정착
에너지자립공동체
스마트그리드 등

<건물>

<기타>

탄소세 도입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IPCC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GDP의 1~1.5% 수준의 재정 투입 고려

출처: 김성환 의원실

공존의 시대와 그린 뉴딜 : 김성환 의원(2020년 1월 15일)



그린 뉴딜: 탄소세 도입을 통한 자원확보

비과세분야 탄소세 도입을 통해 그린 뉴딜 자원 마련

IMF, 2030년까지 톤당 75달러 이상의 탄소세 도입 권고('19.10)
OECD, 탄소세 도입 등 환경세 강화 요구('19.10)
EU 국경탄소세 도입 예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교통/수송분야의 경우 연간 15조원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에너지전환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특별회계 배분금은 2014년 이후 0원.(세수 총 15조원/년)

→ 세금용처 조정을 통해 에너지세제의 목적성 강화

*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고 있는 발전, 산업분야의 경우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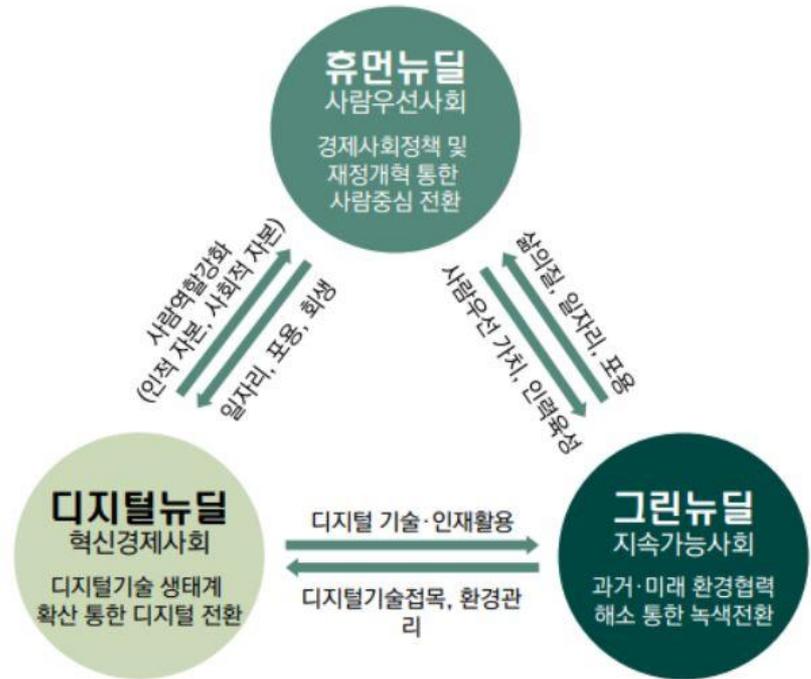
한국 그린 뉴딜(6월1일)



문재인 대통령 그린 뉴딜 4개 부처 지시(5.12)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6월1일)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6월1일)



자료: 전환적 뉴딜(경사연, 2019.7.3)

“코로나 위기에서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6월 9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IV.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 + 3 정 책 방 향	목표 코로나19 국난 극복 +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코로나19 국난 극복	
	㉑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㉒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 ②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③ 위기·한계기업 보호 ④ 고용유지 및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 ② 대대적 투자 활성화 ③ 수출력 견지 및 보강 ④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㉓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공조 ② 국내외 경제·통상리스크 최소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㉔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㉕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② 방역 및 바이오 등 BGI 미래동력화 ③ 유전·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②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③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체질 강화
	㉖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②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③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④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 		
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설정한 혁신·포용·공정·상생의 가치를 지속 확산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 경제·사회 구조혁신 고강도 규제개혁		

디지털 뉴딜 [134조원, 일자리 33만개]

㉑ D.N.A. 생태계 강화

-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②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 ③ 1·2·3차 산업 5G·AI 융합 확산
- ④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㉒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①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 ②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㉓ 비대면 산업 육성

- ①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 ②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③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 ④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㉔ SOC 디지털화

- ① 4대 핵심시설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②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그린 뉴딜 [12.9조원, 일자리 13.3만개]

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 ②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 ③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㉖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①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 ②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㉗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①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②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 ③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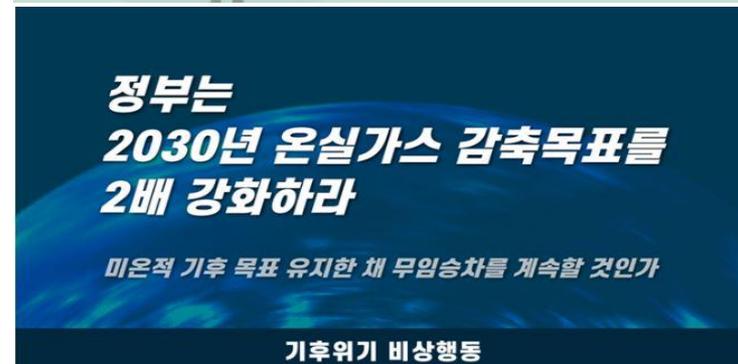
고용안전망 강화 [15조원, 일자리 9.2만개]

- ①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③ 미래적용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 ④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⑤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그린 뉴딜 입법 동향과 시민사회 입장



그린뉴딜 기본법 추진(5.14)



그린뉴딜
미션영의 동반형 제1회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은 어딜의 우선순위가 될까요? 그린뉴딜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사회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입법되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 공청회**

일시 2020년 5월 28일(목)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인사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제 **사단 김연미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1.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정책 3대 정책목표와 7대 과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2.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특별법 주요 내용과 향후 쟁점
이현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지정토론

박문준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무위원	이유진 녹색연합연구소 연구위원	구연희 법률사무소 아이 변호사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	------------------------	-------------------------

주최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 국회의원 심상정

문의 이동광 차장(ccoenergy@naver.com) / 070-4640-2624

일시 2020년 5월 26일(화) 오후 4:00 - 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층)

토론 좌장 : 이소영 당선인
- 김승환 교수 (홍남대학교 전기공학과)
- 김종규 이사 (주식회사 해준)
- 이유헌 박사 (녹색연합연구소)
- 하정림 변호사 (법무법인 테일)
- 윤세중 변호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참가 본문의 링크를 통해 참석 신청
참고로 19명의 신청을 위해 토론회 참석자는 선착순으로 10명을 선정합니다. 현장에서 유튜브 '미소영TV'를 통해 라이브 중계할 예정입니다.

- 문의: soyoungee.camp@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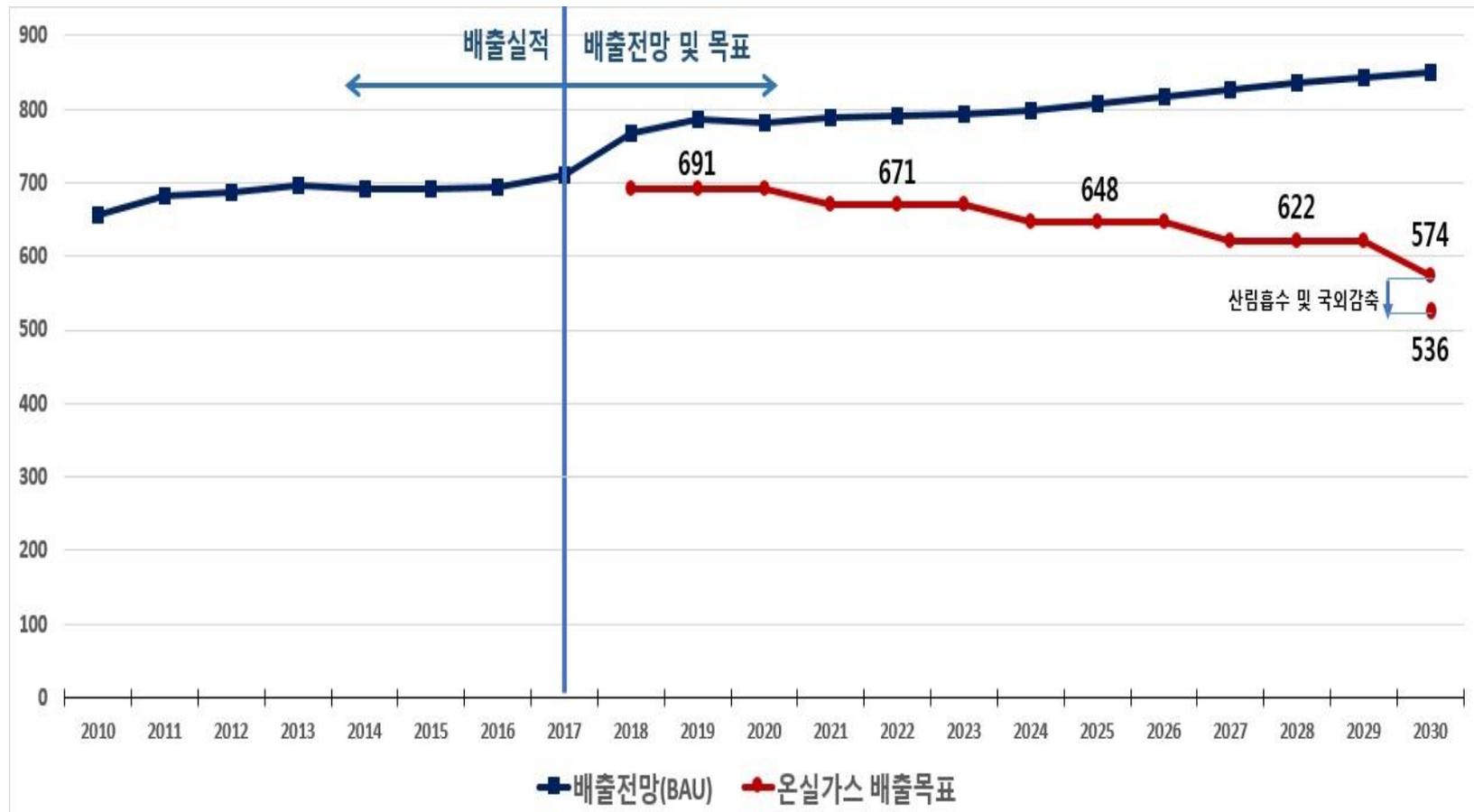
기후위기비상행동 논평(5.14)

한국의 기후에너지 관련 국제 지표

내 용	순위	링크
OECD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	
2018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	
2018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	
2017 OECD 최종에너지 소비	5	
2017 OECD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	8	
2018 세계 에너지소비	6	
2018 재생에너지 비중 OECD(35개국)	35	
2018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OECD	34	
2018 세계 석탄수입국	4	
세계 석탄화력 해외 투자국	3	
2018 세계 원유수입국	4	
2019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61위 중	58	
2018 세계 기후위기 위험 지수(GCRI)	81	
2019 저 탄소 경제 지수(LCEI) G20 중	14	
2019 에너지 전환 지수(ETI) 선진 32개국	31	
2019 에너지 건전성 지수(ETI) 선진국 최하위권인	37	
2020 에너지 안보지수(ESI) 선진 32개국	28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

2030년 5억 3천 6백 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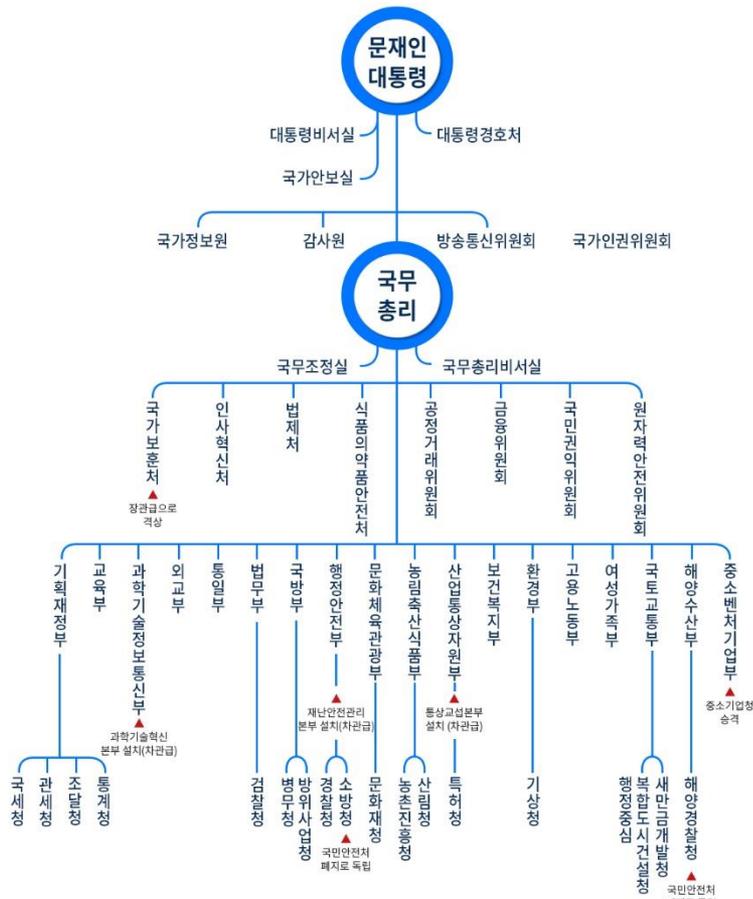


출처: 2차기후변화기본계획, 2019

[장기]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 모든 부처 그린 뉴딜 주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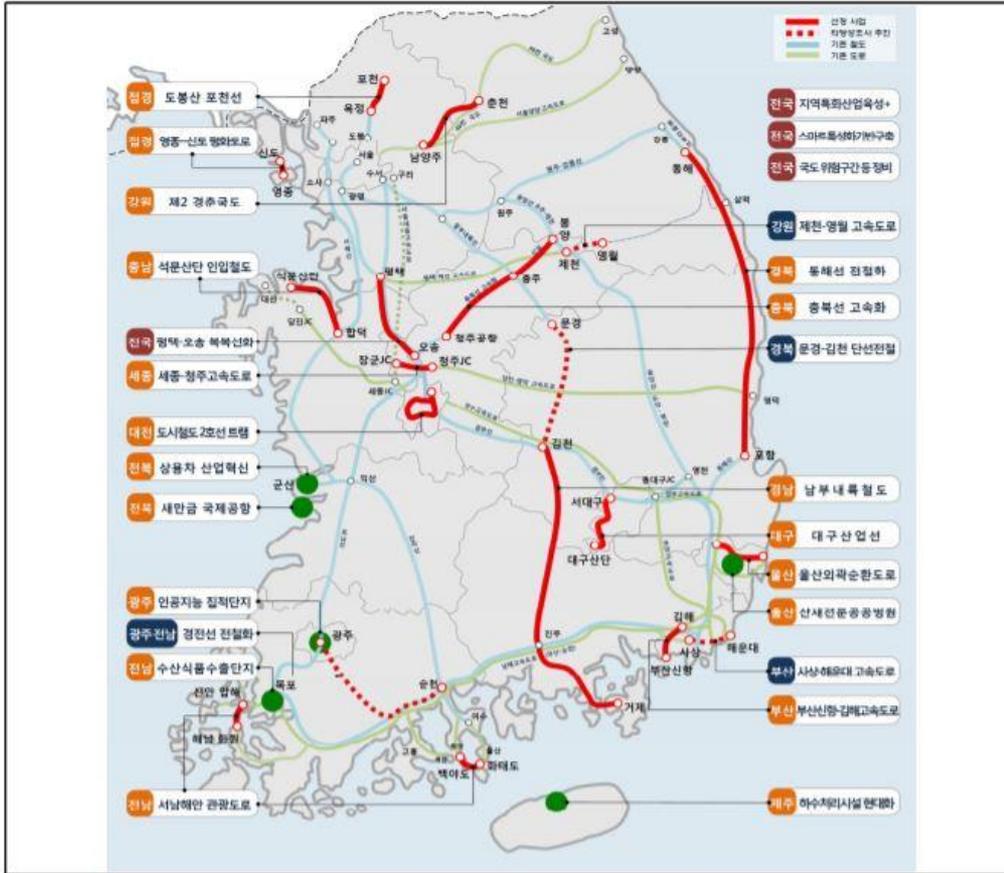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실현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 탈탄소 대전환, 자원**
- **교육부** →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 **과기부** → 넷 제로 달성을 위한 기술 RnD
- **외교부** → 해외 그린 뉴딜 정책, 기후외교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부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 **산업통상자원부** → **좌초 산업, 수요관리 재생 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 미국 유럽 그린 뉴딜에 따른 산업 영향 대책 수립, 산업부문 전환
- **보건복지부** → 기후위기 적응, 취약계층 보호
- **환경부** → **2050년 넷제로, 폐기물**
- **여성가족부** → 그린 뉴딜을 통한 성평등 사회
- **고용노동부** → **정당한 전환, 탈탄소 정책에 따른 고용충격과 녹색일자리 전환**
- **국토교통부** → **좌초 인프라 점검, 건물·교통**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분야 기후위기 대응
- **중소벤처기업부** → 탈탄소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충격 조사와 대책마련



국토교통부 - 좌초 인프라

[그림 III-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추진 중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실행계획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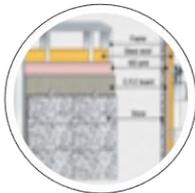
국도교통부 - 공공건물, 학교, 노유자시설 그린 리모델링 (평가 모니터링, 검증)



사진과 자료 출처: 이명주



Insulation Materials



Three-pane wind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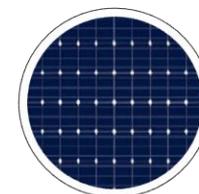
Air tight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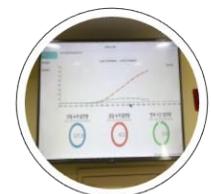
heat recovery ventilator



PV



Monitoring System



산업통상자원부 - 좌초산업

좌초산업이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경쟁력을 잃는 산업
2020년 스웨덴(2022년 예정 2년 앞당김), 오스트리아 탈석탄 완료
유럽연합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10년간 1천억 유로(135조)
체코 탄광지역 노동자 직업훈련 교육, 폴란드 탄광 도시를 문화 도시로 바꾸기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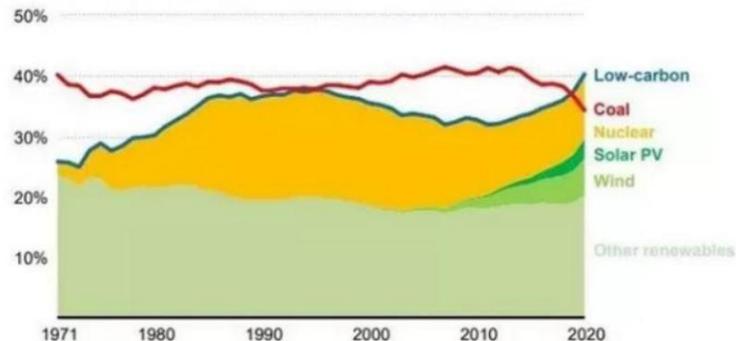
코로나19: 5가지 영향 by WEC(5.18)

1. 에너지 수요 붕괴가 모든 곳에서 나타났다(Energy demand has collapsed everywhere)
2.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석탄과 석유다(Coal and oil were the hardest hit)
3. 흐름에 역행하는 재생에너지(Renewables bucked the trend)
4. 매일매일이 일요일(Every day is Sunday)
5. 조만간 끝나지는 않을 것(it won't be over anytime soon)

지난 50년간 저탄소 연료가 최초로 화석연료를 능가

For the first time in 50 years, low carbon technologies overtook coal as the leading source of electricity in 2019, and they are moving further ahead in 2020.

Global generation shares from coal and low-carbon sources, 1971-2020



출처: 감선교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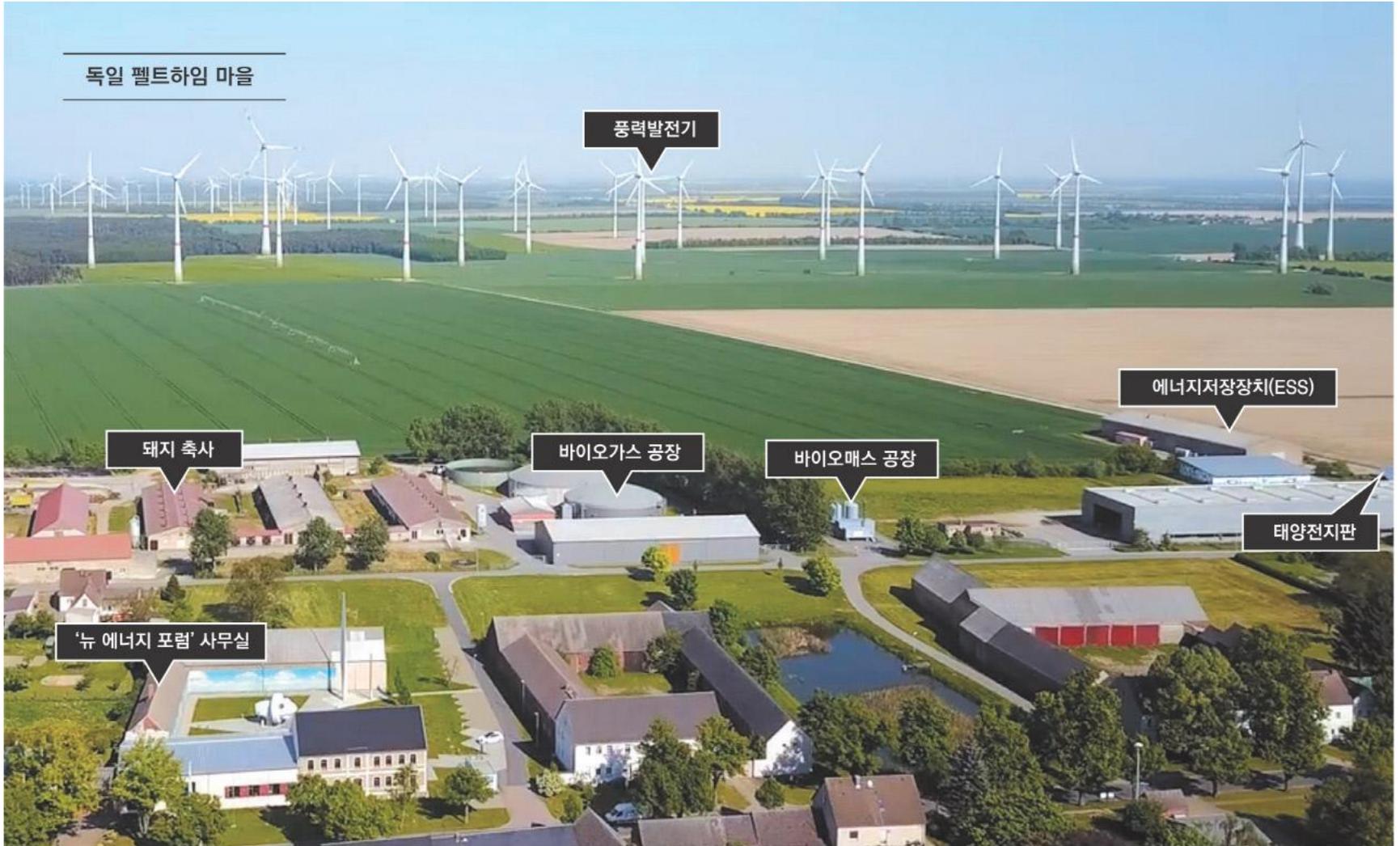
'13년 3,166억원을 고점으로 '16년 1,524억, '19년 477억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시장 위축,
출처 : 에스코 산업 현황 <http://esco.or.kr/escoguide/currentstate>

[대상별 ESCO시장 현황]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산업체	70	67	46
건물	11	12	10
공공	18	21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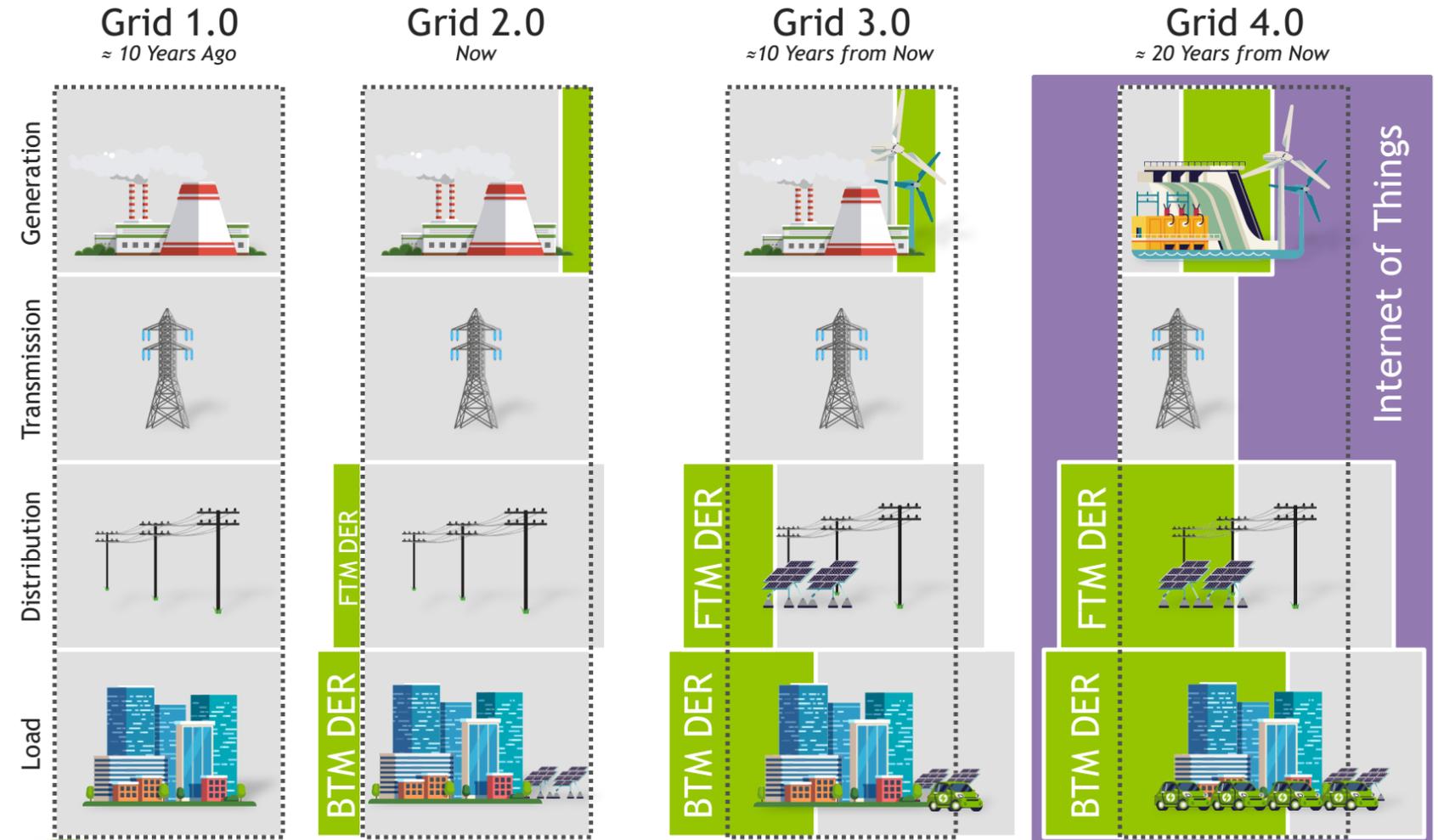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가능에너지 100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트로이엔브리첸시에 있는 펠트하임 마을 전경.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82131005#csidxfe62d1a0e447f1d97a998c610cb3772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 발전 방향



©2016 OATI, Inc.

출처 : Sasan Mokhtari, Ph.D. President & CEO Open Access Technology International, Inc.
 ISGT 2016, Minneapolis, MN September 06-09, 2016

스마트 에너지 시티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체험단
지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3000세대

선택형요금제기반 수요관리,
태양광공유공동체, 공동체 공
유 ESS, 분산자원 가상집합발
전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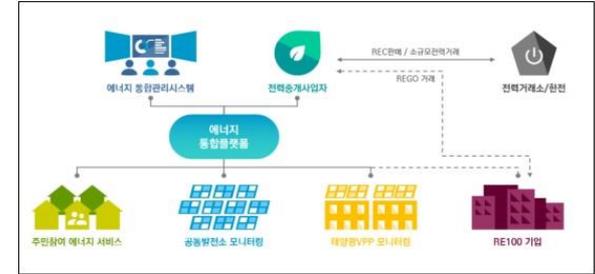
2019.10 ~ 2023.09 (4년)
135억
에너지기술평가원



서초구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
축 사업은 서초구와 한국 동서
발전, 시너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총 40억원 사업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신산
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 마곡지구 주민 참여형
'플러스에너지 타운'
△주민 참여형 수요반응(DR)
도입 △태양광 공동 발전소 구
축 △실시간 에너지 통합 플랫
폼 구축

총 40억원 사업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신산
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국경세와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BCA: border carbon adjustment)'에 관한 사전 실무작업
- EU는 역내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 준비, 탄소국경조정이란 자국의 탄소감축 노력으로 국내 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 상품에도 국경에서 부과하고, 국내 상품 수출 시 탄소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는 조치
- 7월 1일 기후변화센터는 ERCST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 시행
- 유럽 그린딜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변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탄소누출을 우려해 시멘트 등 선별된 분야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한 만큼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소비량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분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유럽 그린 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0 No. 8.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확대 개편된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만든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2017년 7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발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무보고서에 공개

[지속가능·기후금융시대 | ③당장 기후변화 대비해야] 기후재난은 미래세대 아닌 현재 우리에게 닥친 위기
한국도 국제적 규제 요구에 적극 참여 ... 국민연금, 기후변화 위기 대응 계획 세워야 내일 신문 2019-08-08

기획재정부 – 산업 경제 구조 혁신

대한민국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④

포스트 - 코로나 대비

산업·경제 구조 혁신

#안전·건강 #비대면_산업 #소부장 #디지털_신산업

포스트 - 코로나 4대 분야 규제혁신

#데이터·AI #미래차 #의료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

10대 산업 규제혁신 추진

#설립요건_완화 #자회사_지분보유_요건_완화 등

벤처지주회사 규제 대폭 완화

- ✓ 그린은 어디에?
- ✓ 산업 경제 구조 혁신에 탈탄소 산업 경제 제도 혁신 방안 반영해야
- ✓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반영되어 있지만 그린 뉴딜관련 제도 개선 과제는 정리도 안되어 있는 상황
- ✓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함

기획재정부 - [참고] EU 그린 딜 달성 수단

1) 그린 파이낸싱과 투자, 공정한 전환

- GHG 목표인 40% 감소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 260Bil./year로 추산(352조원) (2018년 GDP의 1.5%), 공공과 민간 자본을 모두 동원
 - 25%의 예산을 모든 EU 프로그램에서 기후 프로그램으로 사용
 - Invest EU펀드의 30%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쓰일 것
 - EC는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및 국가은행과 기관과 함께 기후분야 파이낸싱 협력, EIB는 기후분야 투자 목표를 25% -> 50%로 상향 조정
 - EC는 공정한 전환 (Just Transition Mechanism)을 제안하며 공정전환 펀드를 조성
 - 민간 투자 활성화는 녹색 전환의 핵심 - EC는 2020 후반 지속가능한 파이낸스 전략 발표 예정
- 1) 녹색 투자에 관한 분류체계 마련 2) EU 녹색 채권에 대한 표준 마련

2) 녹색예산과 적정 가격 신호

- 국가 예산은 녹색전환의 핵심
- 세제 개혁(tax reforms)은 경제성장, 기후회복력 향상, 공정한 사회에 기여
- 각 회원국의 전환을 도움 주기 위해서 EG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평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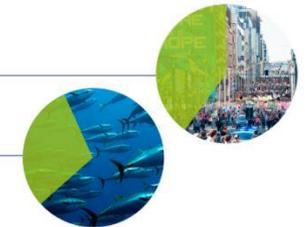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현황조사 시급
 염해피해, 이상기후, 병충해 등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가 가시화
 2차 기기본에 농어촌 분야 기후대응 정책이 적절한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에너지 비용 상승이 농어업과 농민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기후위기 현황 연구에 적절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는가? (인프라 연구)
- 현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체계는 기후위기를 다루기에 적합한 체계인가?
- 농업 농촌 전반의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과 연구 필요(기후위기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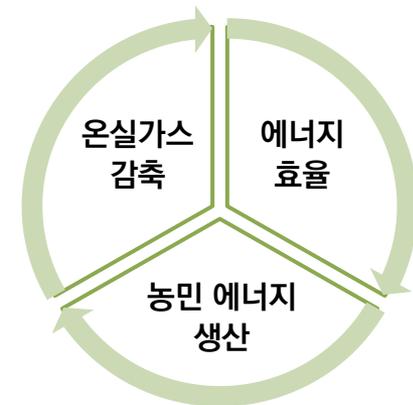
European food must remain safe, nutritious and of high quality. It must be produced with minimum impact on nature.

In EU budget 2021-2027

- 40% of Common Agriculture Policy should contribute to climate action
- 30% of the maritime fisheries fund should contribute to climate objectives



In spring 2020, the Commission will present a Farm to Fork Strategy to:



오바마 정부 그린뉴딜과 MB 녹색성장 비교

부문	오바마 정부 그린 뉴딜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재임 기간	2009.01 ~ 2017.01(8년)	2008.02 ~ 2013.02(5년)
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 입법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지원단 구성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투자세액공제, 재생에너지전력생산세액공제 연비규제, 내후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강 사업 그린카 청정에너지보급
실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투입, 규제와 세액공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육성 예산 투입과 제도개선,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뉴딜' 예산 약 50조 중 '4대강 정비'에 32조 투입 정부 직접 예산집행 또는 보조금 중심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11% 감소 전력 믹스에서 석탄발전 2008년 48%에서 2016년 30%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약속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석탄 추가 전기요금 인하 온실가스 총배출량(백만톤CO2eq.): ('90) 292.9 →('00) 501.4 →('16) 694.1

국가기후환경회의 - 전기요금 합리화,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등의 국가전원믹스 개선’과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등 포함



사람에 쓰여야 한다

전문가칼럼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574] '사람이 중심인 그린'

조선일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사회생물학

입력 2020.05.19 03:13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사회생물학

한국판 뉴딜에는 '그린'과 '사람'이 없다. 다행히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꼭 집어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해 '그린'은 일단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 실제로 '사람'을 구해낼지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용해온 용어로 정리하면 '사람이 중심인 그린'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기술 개발에만 투자하면 결국 회색으로 탈색된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전철을 되풀이할 뿐이다. 기술 못지않게 과학에 투자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자연 훼손에 의해 벌어졌음이 자명한데 자연을 조사하고 연구

하는 일에 투자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 이참에 생태계 모니터링과 야생동물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체계를 따로 마련하라. 그러지 않으면 다음 팬데믹을 막아줄 생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실험실 연구와 기술 개발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생태 백신'도 개발비가 필요하다.

그린 뉴딜은 반드시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포함하는 사업들로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손품 발뚎이 많이 들면 경제성이 없다고 배제됐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덩달아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답답하고 따분한 실내 작업은 기계에 맡기고 육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좋은 야외 활동은 우리가 손수 하며 즐기면 된다.

루스벨트의 뉴딜은 단순한 토목 사업 부활이 아니었다. 노사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험을 도입해 소외된 약자들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해 '새로운 미국'을 건설한 혁명이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이 막강한 정권을 허락한 국민은 혁명적으로 새로운(new) 계약(deal)을 기다리고 있다. 쪼잔한 멍청함과 덧대기 정책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서울시 기후위기대응 시민 활동가

서울시 권역별 기후위기 활동가 양성교육(10회차 20시간 가량)을 진행하고 실천행동(캠페인) 도출을 위한 공론장 운영, 실천행동(캠페인) 진행의 세단계로 진행.

충청남도 우리마을 기후변화취약지역 조사(일자리 1200)

마을 주민들이 자기 마을 별 기후변화 취약지역 조사를 통해 적응대책 발굴 지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연구사업) 표준 조사표 개발, 자료 DB화, 지역별 적응정책(조사사업) 마을별 조사 300개 마을 40억원

기후위기비상행동 - 정의로운 그린 뉴딜을 위한 7대 핵심과제 제안

1. 지구기온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제시한 IPCC 권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친환경 대중교통, 친환경 농업,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
3. 재난구호체제 및 공공의료체제 강화
4.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규제 강화 및 전환
5.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기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전환
6.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우선 구제
7. 신규 석탄발전소와 신규 공항 건설 중단 및 고용 유지와 기후보호 조건을 전제로 두산중공업 지원



그린뉴딜

광주판짜기 100인의 원탁

기후비상시대, 극단적 불평등, 일자리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자

12월 21일 (토)

09:30-21:00 하루종일

서구청 2층 대회의실

참가비 10,000원 (연말산입, 영수증 지출 가능은 별도)

참가신청 <https://bit.ly/광주그린뉴딜원탁>

프로그램

09:00-10:00	참가자 소개
10:00-11:00	김동진, 기후비상시대, 국민적 불평등과 그린뉴딜 / 김민진, 산업연계형 그린뉴딜-에너지산업
11:00-12:30	김동진, 기후비상시대의 한계시대 그린뉴딜 / 김민진, 그린뉴딜의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12:30-13:30	점심
13:30-15:20	김동진, 우리는 어떤 그린뉴딜을 만들 것인가?
15:30-18:00	김동진, 기후비상시대, 그린뉴딜의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 김민진, 그린뉴딜의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19:00-21:00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제언

- 기후변화 대응의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원칙 반영 → 경제정책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반영해야
- 그린 뉴딜 개념, 그린 뉴딜을 통한 목표 제시 필요 → 7월 종합 계획 (열린 정책)
- 예산 규모의 적절성 : 2020-2022년 12.9조 투입
(한국 연간 6조 / EU 그린 딜 135조+국가 개별 예산)
그린 뉴딜 추경 1조 4천억원 < 두산중공업 채권단 **총 지원금액 3조6000억원**
- 정책 내용의 적절성 : 농업, 폐기물, 공원 녹지, 생물다양성 등 포괄적인 접근 필요
-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구축 (제도개선 과제 반영)
(에너지)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 한전개혁, 전력산업 시장 선진화 [효율+재생E]
(수송) 내연기관 퇴출 시점, 수송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전기·수소차
(건물, 주택)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에너지 등급의무화, 리모델링 활성화
- 탈탄소 전환 정책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탈석탄과 전기차 확대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과 경제영향, 지역사회(충남, 경남, 울산 등)에 대책 → 정의로운 전환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법과 제도

목표	주요 내용
2030, 2050 기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기본법,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 ~ 2040, 제3차 국가적응대책('21~'25) 수립 예정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 (2018.7)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관련 계획의 정합성 확보 및 친환경 전원믹스(석탄발전소의 과감한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강화 필요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할당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 (산업) 탈동조화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향상 및 신기술 보급 필요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건물)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 확산 및 고효율제품 보급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공해차 보급 활성화('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보급) • (수송) 저탄소 운송수단 확대,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한 지능형 교통관리 체계 구축 필요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차 농업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 수립예정) • 농촌진흥청 2,811억 '신농업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2020-2027)
생태서비스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종 및 유전자원 보전기반 강화
독성 없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자원순환 대전환 로드맵

(감축정책) 선진적 정책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가시적 효과는 미흡

(계획위상)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총괄 및 조정 기능 부족

(이행점검)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의 부재로 실적과 정책효과 간 격차 발생

그린 뉴딜 기본법과 특별법

그린 뉴딜 기본법 (기후위기대응법, 탄소중립법)

- [평가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한국의 기후위 기 관련 법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소관부처 국무 조정실이고,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 기후위기 대응을 한국사회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우산정책
-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 책수단 방식이기 때문에 법안의명칭으로 하기 어려 움. 기후위기 대응법 또는 탄소중립법과 같은 기후위 기대응 법으로 가야 함
- 녹색성장기본법과 충돌 불가피 - 녹색성장기본법 명 칭부터 내용 대폭 수정. 그린 뉴딜의 가치와 철학(시 대정신)을 담아 저탄소→탈탄소(넷제로 목표), 성장 →평등
- 2020년 한국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감축 목표 제시 해야 함
- 2022년 차기 정부에서 바로 실행가능 하도록 2050 년 넷제로를 위한 정부조직구조 개편(기후에너지부), 독립적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신설, 탄소예산, 탄소 영향평가제 등 반영

그린 뉴딜 특별법

-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동원법
-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그린 뉴딜’ 계획 수립, 수립한 계획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과정
- 급격한 탈탄소 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녹색산업과 일자리 확대
- 상임위, 실행주체(부처), 점검체계
- 영국은 강력한 기후변화법이 있는 가운데, 영국 녹색 당 캐롤라인 루카스의원이 노동당 클리브 루이스 의 원의 서명을 받아 2019년 3월 29일 탈탄소화 및 경 제전략법안(Decarbonisation and Economic Strategy Bill: 일명 그린 뉴딜법) 제출.
- 그린 뉴딜위원회에서 그린 뉴딜 전략 수립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의 대표자, 다양성(성별, 나이, 직업, 거 주 지역 등)

정의당 그린 뉴딜 특별법안(2020년 5월 28일)

구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안
법의 성격	특별법 (10년 한시운영)
목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문제 해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탈탄소사회를 이루는 것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탄소흡수원	산림탄소흡수량 중심
사업 주도	공공성·민주성·투명성 확보 공공부문 주도
재정 계획	정부의 재정마련 의무 명시. 국가재정운영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의무. 전체 소요 재정의 15% 이상 정의로운 전환 계획에 사용 (추후 탄소세·에너지세제 개편)
위원장	대통령
민간위원	민간위원 1/3 이상. 노동단체, 농어업 생산자 단체, 중소기업인단체,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환 대책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그린뉴딜 특구 지정

출처: 정의당

Decarbonisation and Economic Strategy Bill

A B I L L

To place duties on the Secretary of State to decarbonise the United Kingdom economy and to eradicate inequality; to establish a ten-year economic and public investment strategy that prioritises decarbonisation, community- and employee-led transition from high-carbon to low- and zero-carbon industry, and the eradication of inequality; to require the Government to report on its adherence to the strategy; to establish higher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ir, water and green spaces; to make provision to protect and restore natural habitats; and for connected purposes.

*Presented by Caroline Lucas
supported by
Clive Lewis.*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26th March 2019.*

- (b) to promote the Green New Deal within every branch of Government, including local government, and across society;
 - (c) to support and advise the Secretary of State in pursuing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Green New Deal, including on—
 - (i) the timeframe for policy changes, 5
 - (ii) the financial implications, and
 - (iii) how any costs should be met; and
 - (d) to report to Parliam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 5.
- (2) The strategy prepared under subsection (1)(a) must be laid before Parliament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this Act comes into force. 10
- 4 Governance of the Commission**
- (1) The Commission is led by a board of Commissioners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 (2) There shall be a minimum of nine and a maximum of 15 Commissioners at any time. 15
 - (3) In making Commissioner appointments, the Secretary of State must have regard to—
 - (a) the balance of expertise and skills on the Commission, to include representation from civil society and trade unions;
 - (b) diversity on the Commission, including in— 20
 - (i) gender,
 - (ii) age,
 - (iii) class,
 - (iv) ethnicity,
 - (v) geographical area of residence, and 25
 - (vi) political affiliation (including no affiliation).

그린 뉴딜 논의 전개 방향

2020 6월 국회
그린 뉴딜 입법개시

코로나 19

2020 7월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 11월 미국 대선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과제 발굴 이행방안 마련

2020.12 2030 NDC
2050 장기저탄소발전계획 제출

2021(상반기)
P4G 정상회의

2022 3월
20대 대통령 선거

2021
대선 후보 기후·
그린 뉴딜 공약

2021. 11
COP26
여수 COP 유치

2021
국회 그린뉴딜
입법작업 지속

[정부의 역할]

- 2050년 넷제로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을 한국 사회 방향으로 설정 (기존 정책 관성과 화석에너지 이해당사자 이해 설득)
- 유럽 그린딜과 그린 뉴딜, 코로나19 충격이 미칠 영향 분석과 대안 마련
- 국가기후환경회의 (전기요금 개편, 전원믹스, 탈석탄 시점, 탈내연기관 시점, 수송에너지세제 개편)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제도 개편 2021년
- 예산, 조세, 금융 방안 마련,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
- 그린 뉴딜 정책 주류화(측정, 평가, 분석)
- 광역과 기초지자체 그린 뉴딜 정책 지원

[국회의 역할]

- (2020~2023년) 21대 국회가 그린 뉴딜 제도화
- 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을 검토해 <그린 뉴딜>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 녹색성장기본법을 기후위기대응기본법(그린 뉴딜 기본법)으로 전환하는 법제화 필요. 특별법에 대해서도 공동 논의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장 마련
- 탈탄소 인프라 구축, 에너지, 건물, 교통, 농업, 폐기물, 생태계, 건강, 안전, 금융, 재정운영 방향 등 각 분야별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